

아바타', '갑(甲) 철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도 '19대 대선평가보고서'에서 대선후보 TV 토론을 결정적인 패인으로 분석했다.

평가위는 “안 후보는 TV 토론에서 크게 실패했다. 내용도 없는 중도를 표방함으로써 오히려 'MB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강화했고, 적폐청산에 반대한다는 이미지,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해 비판은 하지만 대안은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보수표심은 크게 안 후보와 한국당 홍준표 후보로 양분됐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홍 후보는 2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선 출마를 선언해 한국당 후보로 선출됐다. 홍 후보는 특유의 직설 어법을 내세워 TV 토론에서 선전했고, 10% 전후에 머물던 지지율을 대선 레이스 막판에는 20%에 육박할 정도로 끌어올렸다.

■ 문재인 당선...41.08% 득표율 · 17개 시 · 도 중 14곳 선두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의 총 선거인 수는 4천247만19천710명이었다. 이 가운데 26.06%인 1천107만2천310명이 5월 4~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최종 투표율은 77.2%로 3천267만2천175명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으며, 이 중에서 1천342만3천800표(41.08%)를 차지한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후보는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전국 시·군·구 중 175곳에서 승리했다.

대구·경북·경남에서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홍 후보는 785만2천849표(24.03%)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99만8천342표(21.41%)를 얻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20만8천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1만7천458표(6.17%)를 득표했다.

재외국민투표에서도 문 후보는 59.0%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안철수(16.3%), 심상정(11.6%), 홍준표(7.8%), 유승민(4.5%)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 '모두의 대통령' 천명...야당 먼저 찾고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 5년의 제19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했다. 그는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라며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훗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월 10일 오후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취임식에는 5부 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야 4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조건인 만큼 원활한 관계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입성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한 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직접 신임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첫날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국정농단 재판

■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

2016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를 뒤흔든 '비선 실세' 최순실(가명 후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파문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재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5월 23일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재판에 넘겨져 5월 23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았다.

■ ‘국정농단’ 관련자들 줄줄이 유죄 판결

• ‘삼성 합병’과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 유죄 선고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범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2심 재판부는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였으며 청와대 개입 여부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질타했다.

• ‘블랙리스트’ 연루 인사들도 실형…박 전 대통령 공모 인정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의 고위 인사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좌편향된 보조금 지원을 바로잡으려던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지원 배제 범행을 지지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일

단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범행에 공모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좌편향의 문예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지원 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던 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구치소에 갇혔다.

김 전 실장도 1심에서 무죄 판단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무거워졌다.

• ‘삼성 뇌물’ 이재용 부회장 판결…1·2심 엇갈리

국정농단 의혹의 또 다른 축이었던 ‘삼성 뇌물’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리며 논란을 낳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에서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이었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며 사건의 본질을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최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이 ‘사초(史草)’라고까지 표현하며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간접 증거로서 큰 역할을 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77억9천735만원 가운데 마필운송 차량 구매 비용(5억원)을 제외한 72억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또 특경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것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출연했다기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해준 액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1심 판단은 2018년 2월 5일 열린 2심에서 크게 뒤집어졌다.

2심은 최 씨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로 보낸 돈은 뇌물에 불과하지 이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건 아니라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또 삼성의 '승계 작업'과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1심이 간접 증거로 인정한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1심의 '정경유착' 프레임을 깨고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일"이라고 달리 규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면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을 선처한 2심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에겐 '재벌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 벌금 180억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2018년 2월 13일 열린 1심에서 주요 혐의의 유죄 인정과 함께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두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했다.

삼성에서 받은 승마 지원금 중에는 용역비와 마필 대금 등 72억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

가 내놓은 결론과 같았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개별 현안은 물론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과 같은 결론이다.

이 부회장의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도 뇌물로 판단했다. 대통령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최 씨가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했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 강제 모금 등 주요 혐의에서 최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개인 뇌물 수수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외에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도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다.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 중이다.

• 국정농단 '몸통' 박 전 대통령 재판...9개월 만에 검찰 구형

최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출몰이 이어지면서 이들과 공범 관계이거나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어느 정도 접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2017년 5월 말부터 정식으로 시작돼 매주 네 차례 집중 심리를 거쳤다. 그

국정농단 사건 주요인물 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	사건	1심	2심	3심
박근혜	재단 강제모금, 뇌물 등	징역 24년(2018.4.6 선고)		
최순실	재단 강제모금, 뇌물 등	징역 20년	진행 중	
	이화여대 비리	징역 3년	징역 3년	진행 중
안종범	재단 강제모금 등	징역 6년	진행 중	
신동빈	박근혜 뇌물	징역 2년6개월	진행 중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	진행 중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진행 중
최지성	박근혜 뇌물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진행 중
장충기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진행 중
장시호	영재센터	징역 2년6개월	진행 중	
김종	후원 강요	징역 3년	진행 중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	진행 중
조윤선	문화예술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진행 중
김상률	블랙리스트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6개월	진행 중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	진행 중
우병우	국정농단 묵인	징역 2년6개월	진행 중	
차은택	광고사 지분 강탈	징역 3년	진행 중	
송성각		징역 4년	진행 중	

※2018.4.6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현황



러나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변호인 측에서 다루는 쟁점이 많아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온 10월까지도 심리는 끝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10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구속 연장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 연장 결정 후 처음 열린 10월 16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처음으로 입을 열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과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는 말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선 전담 변호사 5명을 지정해 박 전 대통령 없는 ‘괄석 재판’을 진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심리를 마무리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2018년 4월 6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2018년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천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난다 해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북한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국제사회 제재 강화

■ 北, 연초부터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2017년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이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졌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도 거세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7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 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첨단 무장장비 연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쉬지 않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한국 사회가 탄핵 정국에 휘말린 2월 12일 동해상으로 개량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IRBM”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2월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으며,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 당국은 이를 뒤인 14일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고 정보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 사건은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3월 6일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진행 중이던 3월 22일에도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나, 이 미사일은 공중 폭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구겼다.

북한은 한국 대선을 앞둔 4월에도 5일과 16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29일에는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발사했다.

4월 15일에는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진행한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었다.

■ 文정부 출범 후에도 11차례 미사일 발사...안보리, 잇단 대북제재결의 채택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도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5월 14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한 발을 발사했다. 북한 매체는 이 미사일에 대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2천111.5km 까지 상승 비행해 거리 787km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이 밝힌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고고도를 고려할 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CBM)급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거리 전략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